

그러나 대부분의 급여에 여전히 부양의 무자 잦대를 적용해 실질적 수급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았다.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아무리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라도 복지서비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실상은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양의무자와의 관계가 거의 끊겼거나 부양의무자조차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생활형편이 어려워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3년간 약 4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전체 인구의 4.8%로 늘린다는 것이다. 인원으로 따지면 16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가구로 따지면 103만 가구에서 161만 가구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런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수급자 대부분은 그간 복지급여에서 빠졌던 비수급 빈곤층이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에 부합해도 돈을 버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정부는 3년 이내에 이들 비수급 빈곤층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빈곤층의 발목을 잡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2020년까지 3만5천 명이 생계급여, 7만 명이 의료급여, 90만 명이 주거급여 혜택을 새로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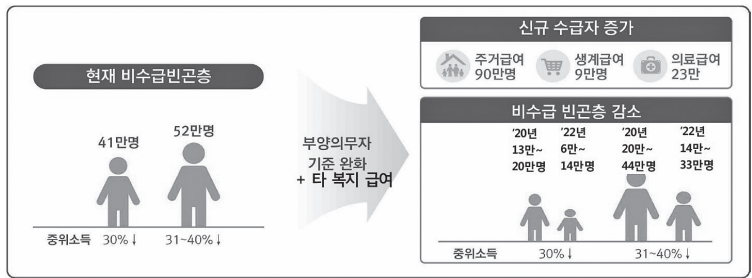
여기에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등 다른 사회복지 정책이 맞물려 상승효과를 내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2020년에 33만~64만 명으로 현재보다 최대 65%(6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 심사를 통한 수급권 부여,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수급자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조치와 더불어 급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환으로 의료급여 자기 부담 수준을 낮추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받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상한은 120만 원에서 8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6~15세 아동 본인부담금은 현행 10%에서 3%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도 20~30%에서 5~15%로,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도 10~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지급되지만 3년 뒤에는 중위소득 45%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직전 3년간 주택 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지역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올리기로 했다. 또 기준임대료를 산정할 때 주택 시세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실거래가격과 수급가구 실제 임차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201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도 2015년 이후 3년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8% 인상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가 받는 교육급여는 현재 최저교육비의 절반 이하를 주지만 2020년에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학용품비는 현재 중·고등학생만 받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일자리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제공되는 자활 근로 및 자활기업 일자리를 5만 개에서 3년 뒤 5만7천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활기업 수는 1천200개에서 1천80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자활 참여자들이 자활기업을 창업해 독립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9만 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만 34세 이하 청년 빈곤층이 일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이 취업해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7년으로 늘리고 부양비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보훈

■ 피우진 보훈처장 취임

문재인 정부의 보훈 정책을 주도할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62) 씨가 임명됐다. 국가보훈처장에 여성 인사가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피 처장은 예비역 중령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화제였다.

197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피 처장은 특전사 중대장을 지내고 항공병과로 옮겨 1981년 여군 헬기 조종사가 됐다. 육군 헬기 조종사를 지내며 남성 군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유리 천장'을 뚫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2년 유방암에 걸려 투병 끝에 병마를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장애 판정을



▲ 5월 18일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피우진 신임 처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받고 2006년 11월 강제로 퇴역당했다. 피 처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이겨 군으로 돌아가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을 지냈다.

피 처장의 강제 퇴역과 행정소송은 남성 중심의 군대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군의 지위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피 처장의 취임은 보훈처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피 처장은 5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9대 국가보훈처장 취임식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새로운 사고와 열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보훈제도를 뒤돌아보고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9년 만에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재인 정부 들어 첫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 만에 제창됐다. 제37주년 기념식이 5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회의장, 피우진 신임 보훈처장을 포함한 정부 인사, 여야 정치권 인사, 5·18 유공자, 유족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5·18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였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5·18 희생자를 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정권교체를 실감케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 이후 2008년까지 제창됐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일부 보수 진영의 반발로 2009년부터 무대의 합창단이 부르던 원하는 참석자들만 따라 부르는 합창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해마다 5·18 기념식에서는 이 노래를 부르는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고 기념식이 이념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업무지시를 통해 5·18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제창하도록 했다. 기념식 중 5·18 유족이 5·18 희생자인 아버지를 추모하는 글을 낭독하며 울자 문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고 무대에 올라가 그를 포옹하며 위로하기도 했다.

■ 보훈처 조직 확대 개편

문재인 정부 들어 보훈처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됐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훈처는 차관급 부처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됐다. 보훈처 직원들의 숙원인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은 아니지만, 일단 장관급 부처로서 정부기관 협의 시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 보훈처의 승격은 이명박 정부 때 차관급으로 격하된 지 9년여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된 보훈처는 1998년까지 장관급 부처로 남아 있었으나 그 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으로 낮아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2004년 3월 장관급 부처로 격이 높아져 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보훈처 차장은 차관회의에 각각 참석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차관급으로 낮아졌다. 문 대통령은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처 격상 계획을 밝히고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예우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보훈처는 7월 26일부로 ‘실5국3관 24과’의 장관급 기구로 개편했다. 기존 조직은 ‘4국 1관 23과’였다.

보훈처는 조직 개편으로 보훈예우국을 신설했다. 기존 보상정책국, 보훈선양국, 복지증진국, 제대군인국 등 4국에 보훈예우국이 추가됐다. 보훈예우국에는 예우정책과, 공훈발굴과, 공훈관리과, 국립묘지정책과를 뒀다. 보훈선양국의 나라사랑교육과와 나라사랑정책과는 없어졌다. 나라사랑교육과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주도한 안보 교육인 ‘나라사랑 교육’을 했던 부서다.

보훈단체협력관도 신설됐다. 보훈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수익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업무를 한다. 이 밖에 기획조정관이 기획조정실로 개편됐고 처장 직속의 정책보좌관이 새로 생겼다. 보훈처 직원은 289명에서 311명으로 늘었다.

■ 보훈 예산 5조원 첫 돌파

국회가 12월 6일 통과시킨 2018년도 예산안에서 보훈분야 예산은 5조4천863억원으로 사상 처음 5조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2%로 전체 예산 증가율(7.1%)보다 훨씬 높았다. 보훈처는 보훈 예산이 대폭 증가한 데 대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훈 예산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6·25전쟁 참전용사 등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36.4% 인상했다. 병원 진료비의 국가 부담도 60%에서 90%로 높였다.

4·19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2018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률은 5.0%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6·25

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단가도 각각 5.0% 올랐다.

보훈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500억원 규모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 신설 등을 약속했다.

■ 박승춘 전 처장 검찰 수사 의뢰

피우진 보훈처장은 취임 직후 보훈처 차원의 ‘적폐청산’ 작업에 착수했다. 보훈처는 박승춘 전 처장 재임 기간 보훈처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12월 박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 전 처장 재임 기간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의 조사 또는 자체 감사가 미흡하거나 전무했다는 것이다.

보훈처가 조사한 박 전 처장 재임 기간 비위 의혹은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위법 혐의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훈처의 공식 기강은 물론 향후 우리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보훈처가 박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보훈처 차원의 적폐청산이 본격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국방정보본부장을 지낸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6년 3개월 동안 보훈처장으로 재직하며 안보교육 사업 등을 통해 보수 이념 확산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인·여성·청소년

노인

■ 어린이보다 많아진 노인…700만 명 돌파

인구 고령화와 출생아 감소가 해마다 심각해지며 2016년 65세 노인인구가 처음으로 유소년인구(0~14세)를 넘어섰

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고령인구는 2016년 676만 3천 명 대비 31만3천 명(4.6%) 증가한 707만6천 명을 기록했다.

반면 유소년인구는 685만6천 명에서 675만1천 명으로 10만 5천 명(1.5%) 감소했다. 특히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총인구 5천145만 명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13.8%)이 유소년인구 비중(13.2%)을 추월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30년에는 1천만 명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1천881만3천 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노인 빈곤문제 심각…기초연금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우리나라 노인이 빈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전체 인구 대비 60.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평균(86.8%)보다 상당히 낮았다. 그 결과 66~75세 노인의 빈곤 위험은 전체 국민 평균의 3.08배, 76세 이상 노인은 4.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전체 빈곤 인구 중 66~75세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8.7%에서 2014년 26.6%로, 76세 이상 노인 비중은 9.2%에서 22.4%로 늘었다. 전(前) 노인 시기인 51~65세에도 고용 불안정성과 조기퇴직, 자영업 전환과 폐업 등으로 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하다.

연구진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노동시장 특성상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의 빈곤과 불안을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적연금의 근본적 취약성과 내재적 불평등을 극복하려면 기초연금과 같은 준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기초연금 지급률은 66~75세 가구주 가구 59.2%, 76세 이상 가구주 가구 75.3%로 높은 편이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각각 월 16만7천원, 17만5천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소득 기반 확대를 위해 기초연금을 2018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 4월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초연금액을 올리려면 2018년 2조7천억원(국비 2조1천원, 지방비 6천억원)이 더 필요하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조9천억원(국비 4조5천억원, 지방비 1조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했다.

이를 통해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6년 현재 46.5%에서 2018년 44.6%, 2021년 42.4%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7년 4월 475만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516만6천 명, 2021년 598만 명, 2027년 810만5천 명 등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금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